

7월 폭우 참사 관련 변 권한대행 경찰 조사 결과 발표 보도 지역언론은 왜 부산시 허술한 행정 묻기보다 입장 대변했나

지난 7월 23일,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초량 제1지하차도가 잠겨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통제만 제때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을 참사였기에 부산시와 동구청의 허술한 시설 관리체계, 재난대응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7월 27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부산시는 면담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건데요. 정의당 부산시당은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부산시의 대응은 사전조치는 물론이고 사후조치마저도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 여겨질 정도라고 비판하며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월 14일 경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직무유기 혐의, 동구청 부구청장과 동구청 담당자 3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동구청 담당자 2명과 부산시 담당자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같은 날, 변 권한대행 측 변호인은 경찰의 혐의 적용이 무리하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역 언론 5개사는 모두 이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9월 14일	KBS부산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변대행 등 8명 검찰 송치>
9월 14일	부산MBC	<초량 지하차도 참사 수사...경찰, 8명 기소>
9월 14일	부산MBC	<사상 첫 형사기소...‘직무유기’ 성립할까?>
9월 14일	KNN	<지하차도 참변, 시장 대행도 기소 의견>
9월 15일	국제신문	<변성완 기소 의견에 부산시 “떠넘기기식 무리한 수사”>
9월 15일	부산일보	<변성완 대행 ‘직무유기 혐의’ 검찰 송치>
9월 15일	부산일보	<공무원 안전업무, 형사 처벌 여부 관심 향후 재판서 첨예한 법적 다툼 벌일 듯>

표 1 9/14-15 ‘초량 제1지하차도’ 경찰 조사 결과 전달한 지역 언론 보도 목록

지역방송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직무유기’ 범위, ‘변성완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지역신문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도하면서도 부산시 입장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국제신문은 <변성완 기소 의견에 부산시 “떠넘기기식 무리한 수사”>(9/15, 박정민 이승륜 기자)에서 기사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떠넘기기식’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달며 무리한 기소임을 부각했습니다.

부산일보는 <공무원 안전업무, 형사 처벌 여부 관심 향후 재판서 첨예한 법적 다툼 벌일 듯>(9/15, 김백상 기자)에서 공직사회의 반응을 주요하게 전달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다’, ‘납득이 잘 안된다’라는 서술과 함께 경찰의 기소 의견을 ‘무더기’라 칭했습니다. 또 17일 부산일보는 <“변성완 대행 기소 의견 송치는 경찰의 면피성 무리수”>(9/17, 최세헌 권상국 기자)를 통해 변성완 권한대행의 법률대리인 청률의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 변 권한대행이 택시 방역소를 찾아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어 눈에 띄었습니다.

“변성완 대행 기소 의견 송치는 경찰의 면피성 무리수”

초광역화에도 감사 관련 부산시, 수사 결과에 강경 입장 “재난대응매뉴얼은 내부 지침 회의부터 하던 골든타임 놓쳐” “상황 맞는 적절한 조치” 반박

울 7일 오후로 3명이 숨진 부산 초광역화차도 참사와 관련, 부산지방경찰청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부산일보 15일 자 1면 등 보도)한 가운데 16일 부산시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변 권한대행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률’과 부산시 측은 “경찰이 발표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뉴얼 이행 여부 등이 핵심 쟁점
법무법인 정률은 경찰 기소 의견에 △재난대응 행동수칙(매뉴얼) 이행 여부 △호우정보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 주재 여부 △초광역화차도 상황 구제책임을 정률로 내세웠다.

정률 측은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호우 경보가 발령된 뒤 매뉴얼대로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초광역화차도 상황을 보고 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무유기로의 성립 근거



16일 오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동구 부산의 택시방역소를 찾아 시설 점검과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로 들고 있다고 전해한 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5에서 정하고 있는 매뉴얼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의 유형에 따라 예,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조치 사항을 정리한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률은 “핵심은 무조건 매뉴얼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뉴얼의 취지에 따라 재난방지 대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7은 매뉴얼이 절대 지침이 아니라는 전체 아래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 개발할 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위 시행령에서도 매뉴얼은 계속적으로 다양한 재난 유형에 맞춰 연구, 보완돼야 하는 성격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호우경보 발령 시 상황판단회의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 7월 23일 오후 8시 호우경보 발령과 동시에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이 근무상황을 점검했고, 오후 8시 50분께 변 권한대행이 총력 대응을 지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보고와 지시가 내려졌다”며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는데, 회의부터 우선적으로 주재할 경우 실제 예방조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회의부터 한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로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지시 여부에 대해서 정률은 “변 권한대행은 시민안전실장, 재난대응과장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는 등 후속조치에 대해 지시를 했다”면서 “경찰이 말하는 ‘구체성’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된 시점에 매뉴얼대로 긴급구조통제단원장 지휘소, 현충유급요소를 설치 등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재난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시와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법원, 직무유기 판단은 변 권한대행과 부산시 측은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재난안전대책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고에 무관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경찰의 기소 의견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 정률 측은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있어 공무원이 법원,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립의무를 위반하

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경우 어떤,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기소 의견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의 기소 의견 송치를 두고 경찰과 부산시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경찰이 송치 후 수사에서 변 권한대행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무혐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경찰이 경찰의 주장 그대로 법원에 남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도 경찰의 엄격한 법 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부산 거제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는 재판서로 인정받기 어렵다. 사실상 사문화돼서 성립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도 “경찰도 횡령 같은 죄목과 달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은 법원에 가서 다투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기소 여부에 앞서 이 부분을 고심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인 사안이나 상황, 사회적 여론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최세헌·권상국 기자 comse@busan.com

▲ 부산일보, 9/17, 2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떠넘기기식’, ‘무더기 기소’라 평가할 때, 연합뉴스는 <파일 ‘복붙’해 부산시장 권한대행 주재 가짜 회의록 만들

어>(9/15, 김선호 기자)를 보도했는데요. 경찰 수사로 드러난 회의록 허위 작성 사안에 초점을 맞춘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경찰은 이 공무원이 상부 지시 없이 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안부까지 보고한 점, 회의록 작성 방식, 이전 회의록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상당 기간 호우 대책회의록이 허위로 만들어져 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며 부산시와 동구청의 관행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9월 18일 <‘지하차도 참사 때’ 비틀거리며 귀가해 잠잔 부산시 재난책임자>(김선호 기자) 에서 폭우 당시 변성완 권한대행의 부적절한 행보를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경찰 취재를 인용해 변 권한대행이 당시 외부 일정을 강행하고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귀가했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 화면을 확보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부산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인 변 권한대행이 직무에 소홀했다는 문제 제기는 언론의 감시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부산MBC가 단신으로 전한 게 전부였습니다.

연합뉴스의 18일 보도 이후, 부산시가 낸 해명자료에 따르면 7월 23일 변 권한대행은 18시 30분부터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일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폭우 비상속 관사서 보고받고 지시...업무수행? 직무유기?>(9/18, 김광수 기자) 기사엔 ‘지역 언론사 순회 간담회’라고 당일 변 권한대행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9월 18일	연합뉴스	<지하차도 참사 때‘ 비틀거리며 귀가해 잠잔 부산시 재난책임자>
9월 18일	부산MBC	<‘지하차도 참사’ 때 폭탄주 마시고 ‘비틀 귀가’>(단신)
9월 21일	국제신문	5면 <“지하차도 참사 때 변성완 취해” 보도 논란 부산시, 통화기록.행적 등 밝히며 반박>
9월 22일	국제신문	4면 <변성완 “수사정보 유출로 악의적 보도”...경찰에 강력 반발>

표 2 9/18-22 ‘초량 제1지하차도’ 경찰 조사 결과 전달한 지역 언론 보도 목록

국제신문은 다음 날 변 권한대행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그밖에 지역언론은 추가 보도가 없었습니다.

“지하차도 참사 때 변성완 술취해” 보도… 市 행적 밝히며 반박

(부산시장 대행)

**市 “간담회 뒤엔 폭우 상황 점검
안전실장 등에 수차례 대비 지시”
통화기록-동선 등 모두 밝혀
일부 언론 보도내용 정면 대응**

부산시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중앙지하차도 참사 당일 비를 가릴 정도 로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거나 오자 당일 변 대행의 동선과 통화기록을 공개하는 등 적극 반박했다.
시는 ‘시장 권한대행, 호우경보에 피 리 실시간 유선 보고 및 지시 이행’ 제목 의 해당자료들 20일 냈다. 지난 7월 23 일 동구 초당1가 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남과 관련, “경찰이 식당과 관사 주변에 서 변 대행이 술에 취해 비를 가리는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사망자 발생 보고를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잠을 잤 다”는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시는 “권한대행은 7월 23일 근무 직면함과 시 정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식사했으 나 과도한 음주를 한 바 없다”며 “호우경 보 발령에 따라 시민안전실장 등에게 유 선으로 철저한 상황 대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일과 다음 날 새벽 변 대행이 시민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재난 대응과장 등과 나눈 통화 시간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틀 보면 변 대행은 7월 23일 오후 8

시1분 시민안전실장에게 전화해 ‘행차 히 대비하고 즉시 연락하라’고 지시했 고, 9시18분 수영구 관사에 도착했다. 9 시50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문자로 보 고를 받고 ‘나가볼 상황이면 연락 바란 다’고 답했다. 10시5분 소방재난본부장 이 나옴 상황은 아니다. 안행 구조했다. 고 유선전화로 보고하자 10시5분 시민 안전실장에게 유선으로 ‘비상상황시 연 락하면 즉시 현장에 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5차례 더 유선 보고를 받거나 지시 했고, 다음 날 0시7분과 10분에 사망자 가 각각 1명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변 대행은 0시20분 소방재난본부장에 게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는 등 최종 보고를 받았다. 새벽 3시5분 세 번째 사

망자가 현장에서 발견됐으나 변 대행에 게 보고되지는 않았다. 변 대행은 2일 오전 6시13분 시민안전실장에게 문자로 ‘피해현장 가볼 곳이 있냐’고 물으며 일 무를 시작했다. 시는 “해당 보도문이면 실시간 유선 상황보고 및 지시가 불가능 하므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 으로 재난 발생 대응 시스템을 더욱 체계 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 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경찰팀이 부산시 감시를 받았다. 행안부는 최근 경 찰 수사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변 대행 과 재난 대응 담당 공무원들의 참사 당일 행적과 대응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 으로 알려졌다. 박영민 기자

▲ 국제신문, 9/21, 4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변 대행 기소 의견 송치부터 참사 당일 권한 대행의 행 보에 대한 의혹, 권한대행의 항변까지 지역 언론이 주목하고 검증해야 할 이슈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부산시 입장을 전달하는데 치중했고, 추가 의혹 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역 언론의 침묵이 혹여 폭우 당시 권한대행의 행보였던 ‘지역 언론사와의 순회 간담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 니다.